

## 제15장 지방의제21

### 1. 「의제21」

- 인류는 역사의 전환점에 처하여 있고 그 당면 문제들은 인구증가, 국가간국가내의 불균형, 빈곤문제의 악화, 기아, 질병, 문맹 등과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생물종의 감소와 같은 생태계 파괴 등임
- 인류는 자연을 파괴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세대에게도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함
- ‘UN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자 인류의 과제라는 인식이 확인되었음
-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였음
-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행동계획으로 21세기를 향한 과제라는 의미의 「의제21」을 채택함
  - 「의제21」이란 21세기를 위해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으로 유도하는 지침서로 사회경제적 측면,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주요 단체의 역할 강화, 실천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2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에서는 이행계획과 그 실천의지를 담은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여 경제사회분야, 환경자원의 보전과 관리, 제도정비이행수단 등 세부 영역에 대한 「의제21」의 지속적 추진을 확인하였음
- 「의제21」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주요 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주요그룹 : 여성계(women), 청소년(children and youth), 농민(farmers),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근로자와 노동조합(workers and trade unions), 기업 및 산업계(business and industry), 과학기술계(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ies), 원주민(indigenous people)

제 15 장 지방의제 21

<표 15-1> 「의제21」의 구조

구 분	분야별	내 용
전 문	(1장)	전 문
제1부	사회경제부문 (2~8장)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장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속개발 추진과제
제2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 (9~22장)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 청정 관리 및 보전
제3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부문 (23~32장)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 강화
제4부	이행수단부문 (33~40장)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21」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 2. 「지방의제21」

- 지방의제21은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생태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의지를 담고 있음
  -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일명 ‘리우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로로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21(Agenda 21)의 제 28장에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지방의제21의 실천을 강조함
  - 이로써 지방의제21은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의 지방정부들의 중요한 실천 과제로 자리매김함
- 지방의제21의 특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및 운영’임
  - 지속가능성이 지방의제21 존립의 기본 목표로서 실체적 가치를 의미한다면, 거버넌스는 지방의제21 실천에 요구되는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이 둘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음
- 결국,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발상 전환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
  - 지방의제21은 기존의 중앙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계획의 차원을 넘어 민과 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설계하고 실천하려는 상향식 계획을 강조하고 있음
  - 지방의제21은 기존의 협의의 물리적 환경계획 수준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도시계획 및 교통 등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의미함
  - 지방의제21은 구상과 실행이 분리된 형식적 계획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과 행

동규범의 제시는 물론 실천 기간과 대상, 평가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실천계획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창조적인 실험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천을 위한 물적 조건과 사회제 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 「지방의제21」 수립현황 및 진단

### (1) 국내현황

-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은 1990년대 들어 지구적인 차원으로 등장한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대응이라는 외적 조건과 민주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지방화로 인한 지방 자율성의 증대라는 내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적용되기 시작하였음
- 1992년 리우 회의를 통해 제안되고 1994년 영국 맨체스터시에서 열린 ‘지구회의’(Global Forum)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지방의제21은 지난 10년 동안 전체 자치단체들의 90% 이상이 지방의제21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음
- 공식적 추진현황
  - 2009년 8월 현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89.5%인 2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음. 이 가운데 3곳은 추진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995년 부산을 시작으로 1996년 대구, 경북, 1997년 서울, 광주, 충북, 경남에 이어 2002년까지 16곳 모두 지방의제21 수립을 완료하였음
- 지방의제21 추진 단계별 평가
  - 도입기 (1995-1998)
    - 1995년 부산시가 의제 작성을 시작한 이래 1998년까지는 몇몇 선도적인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방의제21이 도입되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1998년까지 지방의제21을 수립한 곳은 전체의 23.8%(59/248)이며, 의제 추진기구는 20.2%(50/248)였음
    - 도입 과정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요구가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지역과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지방의제21을 자치단체 경영의 중요한 실적으로 인식했던 지역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
    -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제21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1997년에 “지방의제21 작성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자치단체들의 지방의제21 수립을 독려함

제  
15  
장  
지  
방  
의  
제  
21

제  
15  
장  
지  
방  
의  
제  
21

- 확산기 (1999-2003)
  -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 볼 수 있음
  - 1999년부터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창립하면서부터 지역별 지방의제21 실천활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호학습 효과를 높여 왔음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2001년부터 지방의제21 실천의 우수사업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 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환경부와 함께 ‘지방의제21 전국편람’을 발간함
  - 이 때부터 지역 개별적으로 수립추진되어 오던 지방의제21 활동들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연대를 맺고 서로의 활동 경험과 정보들을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고받게 됨
  - 또한 2002년 WSSD 회의 참가 전후를 계기로 지방의제21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사업과 활동 사례들에 대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확대됨
  - 전환기 (2004-현재)
    - 10년의 역사를 통해 의제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수가 200여 곳이 넘을 만큼 양적 확대를 거듭해 온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오늘날 질적 도약을 위한 전환기에 놓여 있음
    - 지방의제21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와 관심 및 이해, 참여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의제활동 참여자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족되어 지방의제21의 안정적인 실천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활동이 미약한 관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제 제작성과 추진전략 모색 등 의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 노력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지방의제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음
  - 수립과정 : 워크숍/세미나(85%), 설문조사(75%), 전문가/시민간담회(75%), 관련위원회 의견청취(55%), 공청회(50%) 등
  - 집행과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90%), 교육프로그램 운영(85%), 홍보프로그램 운영 (70%),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45%) 등
  - 평가과정 : 모니터링(55%), 평가보고서 작성(40%), 평가결과 보고회(40%) 등
- 국내 지방의제21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47%) : 폐기물, 수질, 산림녹지, 수량, 대기질, 생태계 순
  - 사회(25%) : 지역문화, 복지, 위생 순
  - 경제(10%) : 교통, 에너지 순
  - 제도(18%) : 도시계획, 환경교육 순

## (2) 지방의제21의 추진성과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설계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지방의제21'의 실험은 민과 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임
- 따라서, 국가주도의 성장제일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척박한 토양 위에서 지난 10년간 지방의제21 수립 및 실천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확산과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선도적으로 축적해 온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제21을 통해 이룩한 구체적인 성과들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음
  - 지난 10년간 90%가 넘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21 관련 활동에 참여할 만큼 양적 성장을 나타냄
  - 이러한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2002년 WSSD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실천 사례로 지방의제21을 소개되기도 함
  - 지방의제21을 통해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논의를 지역사회로 확산시켜 옴
  - 또한 초기의 '환경' 중심의 의제 활동에서 벗어나 조금씩 의제 활동 영역을 '사회', '경제', '제도' 분야로 확대시켜 온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음
  -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협치(local governance)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음
  -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의제21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강살리기', '하천 및 생태계 복원', '마을 만들기', '환경교육' 등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출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함
  - 지방의제21을 통해 지역내 네트워크(intra network)는 물론 지역간 네트워크(inter network)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실천 주체들간의 소통 및 교류 확대와 협력적 실천 기반을 조성해 옴
  -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서 보듯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제21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차원에서 역할과 책임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제 15 장 지방의제 21

제 15 장 지방의제 21

## 2) 충청남도

- 「푸른충남21」이 1996년에 수립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산, 공주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수립 완료하였으며, 5개 자치단체가 수립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음
  - 8개의 사군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민간참여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남도 16개 사군 가운데 푸른천안21, 푸른보령21, 맑고푸른당진21, 늘푸른예산21, 푸른태안21, 푸른연기21, 푸른서산21, 푸른서천21, 푸른홍성21, 푸른아산21 등 10개 사군에서 지방의제21이 수립되어 있음

## 3) 선진 국가들의 지방의제21 운영과 시사점

### (1) 선진국의 지방의제21 운영 상황

- 지방의제21에 대한 정부 또는 정책결정자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정치적 리더십 발휘로 지방의제21이 활성화되고 있음
  - 영국 : 1997년 블레이 총리가 "2000년까지 영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21 전략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지방의제21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됨
  - 독일 : 1998년 6월 하이델베르크에서 연방환경부(BMU)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회의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방의제21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밝힘
  - 스웨덴 : 2020년까지 국가 전체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을 정부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과 관련한 대규모 국제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함
  - 영국 : 1994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지구포럼'(Global Forum)
  - 일본 : 1997년 12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회의'
  - 스웨덴 : 1972년 '스톡홀름 회의'
  - 덴마크 : 1994년 5월 지속가능한 지방(도시)발전을 위한 알보그(Aalborg) 회의
-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의제21 활성화와 실천활동을 촉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스웨덴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방투자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 법안'(LIPs)을 통해 지방의제21과 관련한 활동들을 지원함.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전체 소요비용의 30%를 지원하고 환경보호국(EPA)이 지원성가를 평가함

- 독일 : 고도의 자치권과 입법권을 가진 주정부 차원에서 'Agenda Transfer Agency'(Lander)를 통해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덴마크 : Green Fund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보존과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
- 지방의제21이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적합한 방향으로 행정조직 개편 노력이 진행되어 있음
- 영국 : 중앙행정조직 즉 '환경식량농촌부'(DEFRA)에서 환경업무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공간개발, 농업 및 식량관리 등 관련업무까지 단일 조직으로 흡수통합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 독일 :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 속에서 지역 스스로 지방정책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의 범위가 크며,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협력적 조율을 제도화함으로써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제도적 연계성을 체계화함으로써 환경계획의 공간화, 공간계획의 환경성 강화를 이끌고 범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 덴마크 : 환경에너지부 주도하에 도시주택부, 교통부, 복지부와 협력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결합시키고 있음. 또한 2002년 계획법 체계 속에 지방의제21을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유기적인 연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 일본 : 환경성, 국토교통성, 자치성 등 행정부처별 긴밀한 협조나 환경계획과 공간계획간의 제도적 연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각 부처별로 시범사업이나 개별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용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음. 특히 국토 및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국토교통성이 자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사업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토지이용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방분권과 자치의 토대 위에서 주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이것을 지방의제21과 관련한 실천 활동과 연계시킴
- 영국 :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지방의회 차원의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함. 또한 그라운드워크 운동을 통한 커뮤니티 차원의 파트너십 경험을 축적해 옴
  - 독일 : 연방주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풀뿌리 차원의 녹색운동에 기반한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정책의 녹색화 실험을 이끌고 있음
  - 스웨덴 : 지방자치의 전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의 기회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덴마크 : 헌법에 지방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협의체와 지방의회협의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 혁신자치체운동과 마을만들기운동을 통한 커뮤니티 차원의 주민참여 경험과 학습기반을 구축해 왔음

제 15 장 지방의제 21

제 15 장 지방의제 21

- 커뮤니티 차원에서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시행해 오고 있음
  - 영국 : 지역사회에 기반한 파트너십 전략 차원에서 법정계획으로 커뮤니티 계획(community plan)을 작성하고 여기에 지방의제21 내용을 결합시켜, 경제사회환경적 요소를 통합한 포괄적 지역사회개발계획으로서 지방의제21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시킴
  - 독일 :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계획 수립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제도적 연계를 이루어 공간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음
  - 스웨덴 : 지방자치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적 목적에 부합하는 커뮤니티계획(community plan)을 수립하고, 지방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작성시 지방의제21의 내용을 반영시킴

## (2)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사례대상인 선진국가들(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일본)이 시사하는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해 오고 있음
  - 중앙과 지방, 부처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의제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차원으로 의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음
  - 오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전통 위에서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운용에 풍부한 제도적 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 지방의제21이 고립화, 형식화되지 않고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내용들이 지방정부의 계획 및 실천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 3. 맑고푸른당진21

#### 1) 현황 및 성과

- 당진군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당진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 자연생태분과, 생활환경분과, 교육·홍보분과, 사회복자유성문화분과 등 4개 분과로 맑고푸른당진21을 수립하였음
- 2011년 현재 맑고푸른당진21은 자연환경분과, 지역계획분과, 사회문화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천협의회는 10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여건상 아직 순수 민간조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맑고푸른당진21의 사업예산은 사업확장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음
  - 2006~2010년사이 경상예산은 32,475천원에서 36,520천원으로 12.4%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20,200천원에서 56,230천원으로 178.3% 증가하였음
  - 기후변화대응사업 등 일반사업 이외에도 환경체험학교(충남도 교육지원청), 환경의 날 행사(당진군), 에너지의 날(당진군) 등 공모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맑고푸른당진21은 그동안 활발한 환경보호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여러 번에 걸쳐 수상을 하였음

<표 15-2> 맑고푸른당진21의 수상내역

수상일	수상내역
2004.6.5	환경의 날 기념식(충남도지사 표창)
2004.9.18	고니마을만들기 대상수상(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장)
2004.12.31	우수사례 평가 대상(환경부장관 표창)
2005.2	공로패-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5.12.23	수질우수마을 최우수상 수상
2007.6.5	충청남도환경보전대상(충남도지사)
2009.6.5	환경보전 표창(충남도지사)
2010.12.13	2010년 녹색생활 실천운동 우수상(충남도지사)

- 당진의 지방의제21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표 15-3> 연도별 주요 활동(2004~2010)

내 용	고 려 사 항
2004	- 해당화만들기 시범사업 - 재활용품 수거대 제작 배포 - 환경체험교육 시범학교 운영 - 순성중 - 제6회 지방의제21전국대회 - 청금리 고니마을 특산물 판매장 설치 - 당진천 생태조사 - 담수호 수질개선방안 모색 보고서 발행 - 당진시 승경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보고서 발행 - 면 생리대 보급 확산 교육 실시
2005	- 2005 세계물의 날 당진지역 행사 -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와 당진시 - 사랑의 가족편지쓰기 - 체험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 석문초 - 산불예방과 산림보전을 위한 숲과 시와의 만남행사 - 자연친화형 수질우수마을 사업 - 2차 해당화 삼목장 조성사업 - 바람직한 당진군 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 - 당진군 보행권 실태조사
2006	- 2006 세계물의 날 당진지역 행사 - 해당화마을만들기 묘목식재 - 연꽃재배 시범사업 - 매니페스토 협약체결 - 사랑의 가족편지쓰기 -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 자연친화형 수질우수마을 사업
2007	- 해당화마을 만들기 사업 - 삼교호 불법그늘 실태조사 - 생태계 복원 사업 - 환경교육 - 삼교호 수계 뱃목탐사활동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의식조사 - 친환경 기업 입주와 가동을 위한 활동 - 생태해설사 운영 - 사랑의 가족편지쓰기 사업

제 15 장 지방의제 21

제 15 장 지방의제 21

&lt;표 15-4&gt; 연도별 주요 활동(2008~2010)

내 용	고 려 사 항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보호수관리실태 조사사업</li> <li>- 삼교호 불법그물 제거</li> <li>- 생태계 복원사업</li> <li>- 환경기념일 행사</li> <li>- 환경교육</li> <li>- 아름다운가게 운영</li> <li>- 당진군 수도사업관리권 타기관 이관에 따른 주민토론회</li> <li>-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절약협약 체결</li> <li>- 친환경기업 입주와 가동을 위한 활동</li> <li>- 생태해설사 운영</li> <li>- 사랑의 가족편지쓰기 공모전</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지 관리실태 조사</li> <li>- 삼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모색</li> <li>- 보호수 관리 실태조사 모니터링</li> <li>-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li> <li>-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li> <li>- 친환경기업 입주와 운영을 위한 활동</li> <li>- 양성평등 부부공동문제달기사업</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조사사업</li> <li>- 시원한 지구 만들기 운동</li> <li>- 당진천 생태조사사업</li> <li>-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li> <li>- 내포 생태·역사·문화 탐방</li> </ul>

## 2) 문제점

-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분과위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 분과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제활동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

## 3) 활성화 방안

- 예산확충
  -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만큼 향후 예방적 차원에서 지방의제21활동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 군의 예산지원은 물론, 지역환경의 오염원이 되는 기업으로부터의 더 많은 환경보호기금을

확충을 필요가 있음

### ○ 홍보활동 강화

-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47.5%의 응답자가 환경보호의 주체로서의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응답자의 38.5%가 맑고푸른당진21에 관해 모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의제21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맑고푸른당진21에 대한 홍보를 읍과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음

## 4) 결론 및 정책제언

### ○ 당진군민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쓰레기와 폐기물, 대기오염, 수질오염 분야의 순서로 환경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분야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 군민은 공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대기오염물질과 자동차배출가스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장 매년 단속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는 축산폐수, 공장폐수, 가정업소의 생활하수 순서로 조사됨.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신설과 확충이 요구되며, 축산공장폐수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오염의 주된 원인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분리수거 미 준수로 조사됨. 폐기물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쓰레기 불법매립 및 소각,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사용, 공장폐수의 불법유출의 순서로 조사됨. 따라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매립 및 소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소음의 경우, 자동차 교통소음과 건설현장의 소음이 주된 오염원으로 조사되어, 이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 당진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청정한 환경유지와 생태보전에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조사됨

- 군민들은 지방의제21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방의제21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당진군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맑고푸른당진21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더불어 예산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 ○ 당진군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무분별한 공장설립을 규제하고, 오염유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 15 장 지방의제 21

제 15 장 지방의제 21

